

李 대통령 “기업성장이 국가 발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

李 대통령, 새솔다이아몬드공업 방문
가장 큰 과제로 ‘회복·성장’ 꼽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R&D 지원
데이터 디지털·AI 전환 필요성
정부, 균형 발전 전략 지속 약속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3일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기업을 찾아 “모든 기업이 새로운 아이টে

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제 결국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패드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 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 제조업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15대 슈퍼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제조 4강 도약’을 위해 혁신·시장·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스타트업·미래 도전 기업·우름 기업·슈퍼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수출보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규제 컨설팅 제공 ▲방산·재생에너지 분야 등 수입의존도 높은 분야의 자립화 ▲앵커기업·중소기업의 직접화된 제조 혁신 허브 확대 ▲클러스터별 R&D·실증센터·인력 양성·규제 특례 지원 ▲정책금융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디지털과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이를 위해선 ▲AI 개발 및 현장 보급으로 모범사례 발굴 ▲2만5000여 기업에 대한 업종 특성에 맞춰 스마트 공장 지원 ▲기술탈취 관련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장관 중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에게, 산자부 장관은 대기업 출신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헤어졌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장관들은 잘 챙겨주길 바란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해당 산업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져서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듯하다”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방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 데 역을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압수수색 무산까지 무기한 농성”

내란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투쟁 돌입

국민의힘이 연일 이어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본청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압수수색 대상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연속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온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연이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특검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지금 1층에 와서 있다. 여차하면 바로 우리 본관 2층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들이닥쳐서 자료를 다 빼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을 보면 (계엄 해제)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3~4시간 동안에 명함, 다이어리, 영수증 등을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영장을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발부한 법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날짜와 내용을 정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다 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단 ‘영장을 받았으니 영장대로 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총 후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근무하는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 특검팀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쳐 압수수색을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붙였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공범으로 허위 선동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여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이제는 민주당 특검의 영장 집행으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꺾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영장 집행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내란 카르텔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조지연 의원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국민 생명 사제하려고 했던 세력이 특검 당연한 정상 수사에 대해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중수청, 행안부 밑으로 가나… 7일 결론 날 듯

與, 의총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중대범죄수사청 거취 결론 못내려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도 쟁점
고위당정협의 통해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거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을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

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참으로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줘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진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검찰청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

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간 바 있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오는 7일 당정 조율 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총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오는 4일 오전 개최한다. 5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고위당정 전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대입장을 최종 조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 만난다

한국·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등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오찬 회동을 갖는다.

3일 대통령실 및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김동명·양경수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인 지난 2월 양대노총을 방문한 적은 있다.

이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만나게 되는 배경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4.5일제, 정년 65세 법제화 등 주요 노동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6년간 공식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불참해왔다. /서예진 기자